

대학·기업 협력 막는 규제 푼다... 교육부, 제도 개선 추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산학협력 규정, 기획재정부와 협의
교원 겸직·이중 소속 문제 등 손질
총장들, 대학 자율성 확대 목소리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연구소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에서 기업과 연구소가 캠퍼스에 들어와 협력하려 할 경우 그에 관련한 규제는 가능한 한 모두 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학이 기업과 연구소와 함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민현 인재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 현재 상황은 대학의 위기가 자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과 기업·연구소 협력을 가로막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충남대 총장(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은 “글로벌대학 사업이나 라이즈 체계 등을 통해 산학협력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다”며 “대학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로 전환하려면 교원 인사와 시설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외부 산업 전문가를

교육과 연구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 절차와 겸직 규정이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교원 겸직과 이중 소속 문제를 포함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하고 교수도 기업에서 활동하는 교차 협력 구조가 중요하다”며 “이중 소속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

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하는 이른바 ‘JA(겸임) 교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교육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 내 기업·연구소 입주와 시설 공동 활용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최 차관은 “산업체와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와 협력하는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강조돼 왔지만 여러 제도적 걸림돌이 있었다”며 “시설 사용료 문제나 국유재산 관련 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연구 성과가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진 한동대 총장은 “연구 중심 대학이 혁신 기업 창출로 이어지려면 대학과 기업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교수가 대학과 기업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기

술 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대학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정책이 전주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자율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려면 임시 제도 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숙 이화여대 총장은 AI 인재 양성 정책에서 여성 인재 확대 전략을 제안했고, 임경호 공주대 총장은 “국립대 통합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지역 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 대학 각 캠퍼스에 ‘캠퍼스 총장’ 제도를 도입해 지역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교실 위기상황 즉각 지원 ‘안심SEM’ 확대

서울시교육청, 규모 약 2.6배 늘려
“안정적 학급 운영 도와” 긍정 평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실에 전문 인력을 긴급 지원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사업을 2026학년도에 전면 확대 운영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수업 방해, 교원 대상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8월 ‘긴급교실안심SEM’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사업 신설 이후 총 393건을 지원한 결과, ‘만족 이상’ 응답이 98.6%에 달하는 등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담임이 혼자 감당하지 않아



2026 상반기 교육지원청 ‘긴급교실안심SEM’ 봉사자 역량 강화 연수 모습. /서울시교육청

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전문 인력 지원으로 수업과 학급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인력 매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러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 1500만원에서 8억 3160만원으로 대폭 증

액하고, 지원 규모를 약 2.6배 확대한다.

2026학년도 ‘긴급교실안심SEM’은 전직 교원, 상담사 등 총 18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학교 기본 지원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주 15시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긴급성과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개통

지역 교통 여건 개선

고양시가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연결하는 ‘행주나루IC’ 전 구간을 6일 오후 2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과 행주산성 방면을 잇는 교통 연결이 완성되며 지역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일 현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서울방면과 행주산성방면을 모두 잇는 행주나루IC 전 구간 연결 완료를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

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지역 당협위원장,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행주나루IC는 고양시 행주로와 제2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으로, 지난해 1월 2일 서울방면 진입로(640m·1차로)가 먼저 개통됐다. 이후 약 1년여 동안 추가 공사가 진행되며 이번에 행주산성방면 진출로(654m·1차로)까지 완공돼 제2자유로와 행주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축이 완성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계약 체결

시흥시, 공정 통합관리 체계 마련

시흥시는 4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의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체결된 총공사 계약으로, 총공사비는 4338억 원 규모다.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사업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마련됐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조성된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 서남권, 미래 혁신 산업거점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추진
교통·산업·주거 균형발전 본격화
마곡·G밸리 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서부트럭터미널 등 유희부지 개발

산업 쇠퇴와 교통 낙후로 ‘서울의 손꼽히는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이 대규모 교통망 확충과 산업 재편을 통해 미래산업 거점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서울시는 교통·산업·주거·녹지전반을 동시에 혁신해 서남권을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된 1.0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총 7조 3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민간투자를 결합하고 사업 추진 속도와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목동선·서부선 등 신규 철도망

먼저 강북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4개 주요 철도 노선을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목동 재건축과 난곡 재개발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상승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남부순환도로와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서부간선도로는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한다.

개화동~신림동 15km 구간에는 남부순환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국회대로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구간에는 4.1km 지하차도를 설치한다. 강남~강서 이동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한다.

◆마곡·운수산단, 산업 혁신플랫폼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 정비

한다.

마곡산업단지는 유보지를 복합용지로 전환하고 ‘마곡형 R&D센터’ 4개소를 조성해 피지컬AI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해 교차로·마리오아울렛 일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수준인 30%까지 확대한다.

운수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산업단지로 개발한다. 고척동에는 첨단 IT 제조·검증·데이터분석 기능을 갖춘 ‘서울 테크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관악 S밸리를 구축해 창업과 첨단 제조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7.3만호 공급

저활용 부지는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10만 4000㎡)는 ICT 기반 물류시설과 상업·주거·업무기능이 결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한다. 운수역 역세권은 복합개발로 지역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여의도 주차장 부지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금융 중심지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남권 신속통합기획 84곳 가운데 36개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모아타운 37개소와 모아주택 1만 1996세대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7만 3000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은 서울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의 엔진”이라며 “교통 인프라와 산업, 주거 환경을 혁신해 도시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